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4.6.28 시행)>

[1]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 ③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④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 ⑤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

정답> ①

해설> ① 비슷한 선례(precedence)가 있는 문제는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쉽게 의제로 채택되고, 유행되고 있는 정형화된 문제들도 정부의제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2014 비전행정학 p.342

[2]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 · 집행한다.
-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 ⑤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답> ①

해설> 회사모형(연합모형)은 'J. March & Simon의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Cyert와 March가 한층 더 발전시켜 그것을 조직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회사(조직)를 유기체로 보지 않고 여러 상이한 목표·개성을 가진 개인·하위조직 간의 느슨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연합체(coalition)'로 가정한다.

- ① 회사모형에서는 조직의 환경이 유동적이고 대안이 가져올 결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합리모형에서처럼 미래예측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전략과 환경과의 타협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 · 집행하는 것은 합리모형의 특성에 해당한다.

▶ 2014 비전행정학 p.385

[3]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

는가이다.

- ③ 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를 말한다.
- ④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답> ⑤

해설>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선발요소(선택요인), 역사적 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호손(Hawthorne)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creaming)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2014 비전행정학 p.474, 478

[4]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 ① 10억 원의 예산
- ② 200명의 교육생
- ③ 연 300시간의 교육
- ④ 50명의 취업
- ⑤ 3%의 국가경쟁력 제고

정답> ④

해설> ④ 설문에서 성과(outcome)지표 내지는 결과지표(result)에 해당하는 것은 50명 취업이다.

①②③⑤ 10억 원의 예산은 투입(input), 200명의 교육생 및 연 300시간의 교육은 산출(output), 3%의 국가경쟁력 제고는 영향(impact)에 해당한다.

성과지표의 종류

(1) 투입지표(input)

사업에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 노력, 장비의 절감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도로건설 · 포장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액이나 사업비 지출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과정지표(process)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공사진척률이나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민원해결 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산출지표(output)

사업의 1차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수행된 활동 자체보다는 생산과정과 활동에서 창출된 직접적인 생산물을 의미한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도로증가 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4) 결과지표(result, outcome)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산출물이 창출한 조직환경에서의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차량통행속도증가율이 이에 해당한다.

(5) 영향지표(impact)

사회에 미친 최종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사회경쟁력 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서비스별 성과지표(예시)>

성과지표	경찰 부서	도로 부서
투 입	조사활동에 투입된 경찰 · 차량 규모	인력 및 장비 규모
업 무	담당사건 수	민원관리, 인력 · 장비 조달
산 출	범인체포 건수	도로건설 규모
결 과	범죄율 감소	통행속도, 사고감소율
영 향	지역사회 안전성	지역 및 산업경쟁력

▶ 2014 비전행정학 p.1265

[5]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ㄴ.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ㄷ.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ㄹ.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ㅁ.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ㄹ, ㅁ
- ⑤ ㄱ, ㄴ, ㅁ

정답> ③

해설> ③ ㄷ, ㄹ, ㅁ은 옳고, ㄱ, ㄴ은 옳지 못한 설명이다.

ㄱ.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 정부관이다. 진보주의는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성 결여를 인지하고,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ㄴ.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대규모 관료제 보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탈관료제, 시장경제화)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구 분	진보주의(평등주의, 좌파)	보수주의(자유주의, 우파)
인간관	·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의 있는 인간관을 전제 · 인간의 비현실적인 냉혹함과 계산방식 때문에 경제인의 인간관을 부정	·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관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을 전제
가치판단	· 자유를 열렬히 옹호(여기서 자유는 정부에로의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를 중시	· 자유를 강조(여기서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 · 소득, 부(富) 또는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경시 · 교환적(평균적) 정의(거래의 공정성)를 중시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성 결여를 인지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봄 ·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개입을 허용	·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 ·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존재로 봄
선호하는 정책	· 소외집단을 돕기 위한 정책 · 공익목적을 위한 정부규제정책을 선호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옹호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반대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	· 소외집단 지원정책 비선호 · 정부규제(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시장지향의 정책을 선호 · 조세 감면 내지는 완화를 강조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찬성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찬성
비 고	·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진보주의, 규제된 자본주의, 개혁주의와 관련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기독교적 보수주의와 관련

▶ 2014 비전행정학 p.185

[6] 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⑤ J. Rawls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원리가 차등조정 원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차등조정은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가장 큰 이익이 가도록 하되 전체의 기회균등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적 자유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2014 비전행정학 p.196

[7]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면허방식
- ② 이용권(바우처) 방식
- ③ 보조금 방식
- ④ 책임경영 방식
- ⑤ 자조활동 방식

정답> ④

해설> ④ 책임경영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경영 방식은 서비스를 소비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의 직접적인 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정부 조직 내 혹은 산하에 단일 서비스의 생산만 담당하는 독립조직(예 공기업 등)을 설치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계속 존치시키지만 서비스 제공방식은 시장논리에 따라 일정수익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①②③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 원래 의미의 민간위탁(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이다. 그런데 E. Savas는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민영화)에 계약, 면허, 보조금, 구입증서, 자원봉사자, 자조활동,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을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유형>

		주 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 단	권 력	일반행정(Ⅰ)	민간위탁(Ⅱ)
		· 정부의 기본업무 · 법령상 규정업무 <정부의 기본업무>	<안정적 서비스 공급>
	시 장	<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	<시장탄력적 공급>
		책임경영(Ⅲ)	민영화(Ⅳ)

▶ 2014 비전행정학 p.273, 272

[8]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 ① 67%
- ② 50%

- ③ 40%
- ④ 25%
- ⑤ 20%

정답> ②

해설> 내부수익률(IRR)은 '편익(B)의 현재가치와 비용(C)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NPV가 0, 편익비용비(B/C)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i)로써 투자원금에 대하여 매년 몇 %의 이득을 되돌려 받느냐의 개념이다. 내부수익률(IRR)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나 조달된 채원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일종의 예상(기대)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

$$\text{현재가치}(P) = A \left[\frac{1}{(1+i)^n} \right]$$

을 활용하여 비용 80억과 편익 120억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하면 된다. 계산 결과 내부수익률은 0.5(50%)가 된다.

$$80 = 120 \left[\frac{1}{(1+i)^n} \right]$$

$$80 = 120(1/1+i)^1$$

$$80(1+i) = 120$$

$$80i = 40$$

$$i = 40/80 = 0.5$$

▶ 2014 비전행정학 p.417, 415

[9]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 ② 금융위원회
- ③ 국민권익위원회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 ⑤ 방송통신위원회

정답> ⑤

해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 2014 비전행정학 p.655

[10]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 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④ 행정협의회
- ⑤ 갈등조정협의회

정답> ①

해설> ①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의·조정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

구 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단체 간 등	동일 시·도내 기초단체간	
조 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조정 결정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 결정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소 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시·도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신 청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
구속력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 구속력 없음(반대 견해 있음). ②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의 조정 결정 : 구속력 있음(필요예산우선편성 직무상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의견 대립(지방자치법 시행령 은 '협의·조정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 2014 비전행정학 p.1420

[12]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 ⑤ 계획예산제도

정답> ①

해설> ① 설문은 2005년 도입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사전재원배분제 : Top-down방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 주면(Top-down),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 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3]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 ⑤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정답> ②

해설> 우리나라의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② 정부 3.0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중시한다. 다양한 형식과 생성속도가 매우 빠른 대용량 데이터(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를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대한민국 정부 3.0
(1) 개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2) 비전과 추진과제 ① 비전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② 목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 신성장동력 창출 ③ 전략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④ 가치 : 개방, 공유, 소통, 협력 (3)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 · 관 협치 강화 ②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③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정답> ⑤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소관사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그 하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국가)이 지방에 설치한 하급행정기관(일선기관)'을 의미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은 직접적 관치행정방식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에 의하여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지게 되어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통제와 책임확보가 어렵다.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적 통일성을 위하여 설치한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을 통해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명확한 역할배분이 곤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이 중복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됨으로써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별 책임행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필요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관장업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집행이 필요한 경우 ② 집행기능을 일선조직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특정한 행정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경우 ④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중앙행정기관(국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⑥ 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전국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⑦ 중앙정부나 인접지역과의 협력이 가능하고 광역행정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⑧ 기타 : 행정의 전문성 제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의 용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등 * 주의 : 지방분권화 (X)
문제점	①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저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에 의하여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에 의한 통제와 책임확보가 어렵다. ② 중앙통제의 강화와 자치행정(자율성)의 저해 :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을 통해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유사 ·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이 중복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됨으로써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④ 고객의 혼란과 불편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이원적 업무수행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관할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지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⑤ 종합행정의 저해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분야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저해한다.
⑥ 단체자치체제상 부적합 :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계의 주민자치에서 운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을 다수 설치하고 있다.
⑦ 경비 증가의 문제 : 수많은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 있다.
⑧ 기 타
㉠ 남설될 경우 자치단체와의 역할갈등과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주민참여가 곤란해지고 자치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진다.
㉢ 지방행정체제의 이원화로 횡적 조정이 곤란해질 수 있다.
㉣ 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주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행정의 통일성 · 일관성 저해(×)

▶ 2014 비전행정학 p.1359

[15]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주민세
- ② 담배소비세
- ③ 상속세
- ④ 취득세
- ⑤ 자동차세

정답> ③

해설> ③ 상속세는 국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 분	도 세	시 · 군세	특별시 · 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특례 :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보통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목적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2014 비전행정학 p.1384

[16]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합리적 · 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정답> ④

해설> ④ ㉡, ㉣은 옳은 내용이고, ㉠, ㉢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 ㉡ 로크(Locke)는 목표가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요인이라는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을 제시하였다.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의 구체성(specificity)과 난이도(difficulty)에 의하여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본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는 개인에게 노력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목표는 노력의 강도를 높여준다. 결국 목표가 명확하고 적당히 어려울 때 더욱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 ㉢ 합리적 · 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의하면, 만족요인을 충족시켜줘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 호손(Hawthorne)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이다.

▶ 2014 비전행정학 p.554, 537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정답> ②

해설> ②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

- ① 한국조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
- ③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공공기관 지정·고시(2014.1)>

공 기 업 (30)	시장형 (1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16)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 정 부 기 관 (87)	기금관리형 (17)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행부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방통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7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생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기타 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토연구원 등 187개 기관

▶ 2014 비전행정학 p.638

[18]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개방형은 '행정조직 내에서 새로운 직무가 생기거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제도로써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체제'이다. 산업사회 전통이 강하고, 직위분류제가 확립되어 있는 미국·캐나다·필리핀 등에서 발달하였

다.

- ③ 개방형의 인사관리는 인사권자에게 재량권을 주어 정치적 · 관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장악력을 높여준다.

<개방형 인사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우수한 외부인재의 등용이 가능 :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등용이 가능(→ 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업무수행의 전문화 · 생산성 ↑) ② 성과관리의 촉진 : 공직의 개방화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에 기여 ③ 공직의 침체 방지 : 문호개방으로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 방지 ④ 경쟁유도 : 좁은 승진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재직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⑤ 신진대사의 촉진 : 신진대사의 촉진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이나 신기풍 주입 가능 ⑥ 시간과 비용의 절감 :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가능 ⑦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 인사권자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어 정치적 · 관리적 리더십의 강화로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데 기여 ⑧ 기타 :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① 재직자의 사기저하 : 재직자의 승진기회 제약으로 사기저하의 우려 ② 장기근속 곤란 : 신분보장이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 ③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 신분의 불안정으로 이직률이 증가 ④ 관료의 비능률화 : 민간전문가의 조직장악이 곤란하고 충성심의 저하를 가져와 비능률을 초래 ⑤ 임용구조의 복잡성 · 비용 증가* : 개방화의 촉진 은 임용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임용비용을 증대시킴 (내부로부터의 임용보다 신규임용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신규채용에서는 실책을 저지를 위험도 큼) ⑥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곤란 : 정실개입의 여지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 ×) ⑦ 공직사회의 일체감 저해(이원화의 폐단) : 개방직과 비개방직을 구별하여 양자의 인사원칙을 달리할 경우(→ 개방직 임용자들은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재직자들은 개방직 임용자들에게 거부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큼)

* 개방형은 공직 내부에서 인력을 개발 ·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대체로 내부임용(폐쇄형)보다 신규임용(개방형)경우 임용비용이 증가한다.

▶ 2014 비전행정학 p.858

[19]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of error)
- ⑤ 시간적 오차(recency of error)

정답> ①

해설> ① 설문은 유형화의 착오(Stereotyping Error, 상동적 오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유형화의 착오(Stereotyping Error, 상동적 오차)는 '피평정자에 대해서 그가 속한 집단이나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사로잡혀 부정확하게 평정하는 현상으로써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의미한다.

▶ 2014 비전행정학 p.920

[20]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정답> ⑤

해설> 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실질상 세출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부속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매년 국회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 것은 맞지만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 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액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を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 · 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 · 세외수입 · 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삭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 · 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2014 비전행정학 p.1149